

◎ R&D 확대와 수출산업화로 농자재 산업 육성한다.

지난 2월 21일 200여명 농산업계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 The- K호텔에서 열린 제15회 농산업포럼에서 농식품부는 농자재 R&D확대와 수출산업화로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등 농자재 산업 육성방향을 제시했다



▣ 농식품부(김종훈 국장) : 농식품 연관산업 포함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 개막

- ① 수출목표 : ('16) 65억불 ⇒('17) 70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 포함 100억불)
- ② 농식품 수출지원 : 선도업체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시장다변화 지원(84억원)
현지 바이어.유통업체 활용 마케팅강화, 빅바이어 DB화, 현지O2O/B2B등 플랫폼활용
- ③ 농기자재.브랜드등 수출 외연확대 : 연관산업순환구조 수출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농자재산업 활성화 : 농기자재팀 김규욱 서기관) R&D지원 및 정책지원사업 확대
- ④ 유기질비료지원 : '17 3,200천톤/1,600, 토양개량제 640억원, 생산시설지원 42억원
- ⑤ 농자재통합 수출정보 DB구축 및 수출컨설팅 제공 : 주요국 수출절차, 바이어발굴
- ⑥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추진 : 비료공정규격에 혼합제 필요비종 선정
- ⑦ 농자재 가격 표시 실시요령 제정 및 농자재 유통단계 축소(4~5 ⇒3단계)
- ⑧ 비료관리법 개정 : 위해성비료 및 원료 수입제한 범위 확대, 휴업신고제 신설 등
품질관리 감독기관 확대 : 농진청+농관원

■ **농촌진흥청 농자재 분야별 중점추진 계획(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

- ① **농약** : 소면적 작물농약 안전성 확보, 드론용 농약 등록
 - 업계 애로사항 의견수렴 개선과제 발굴(3월)⇒개선 추진(3~12월)
 - 농약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 등록시험설계심의 업계자율, 최종 년차 시험은 자사시험제한 * 밀수농약 유통업자 단속강화(적발건수) ('14)260 ⇒('16) 183건
- ② **비료** : **비료제품중 비의도적 혼입농약성분 허용기준 마련('17.8월)** : 농약성분별 식품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최대치로 설정할 계획)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수출지원(조용섭 총괄본부장)**

- ① **해외시장 진출지원** : 해외 테스트 베드사업 중심 농기자재-품종-스마트팜 등 패키지수출위한 해외 전시회 지원 : 중국(3/1~3), 인도(8월) 국제농업박람회, 베트남(6월) 국제유통산업대전, 종합 패키지 수출촉진지원(12억원) : 중국, 베트남 5개소

■ **농협중앙회의 '17 자재사업 추진계획(차성희 단장)**

- ① **농자재 구매 물류시스템 혁신** : 자재 유통센터 건립(영남권(군위) 4월26일 준공식 중부권(안성 '18년초), 호남권(장성, '19년초), 제주권(제주 '19년초)
- ② **비료사업기반 강화** : 구매관리 시스템개선(발주 본부 집중관리 및 품질관리 강화)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사업 내실화 : 원가 조사 대상 확대, 현장 컨설턴트 운영 강화
- ③ **농약 구매제도 개선** : 전국단위 연합구매 추진, 계통품목 확대 상품구색 강화

※ **종합토론(안인박사 제안)**

- ①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예산 확대** : ('17) 31억→('18) 100억원
- ② **유기농자재 가격이 비싸다는 민원해소** : 유기농자재 시후관리 비용 정부예산지원
- ③ **유기농자재를 농식품 수출정책지원대상에 포함 적극적 수출 지원**
- ④ **유기농업자재중 잔류농약 허용기준 조속 설정, 식품첨가물기준적용 규제완화**
- ⑤ **유기농자재 R&D 연구지원 확대 현장연구 및 품질 우수제품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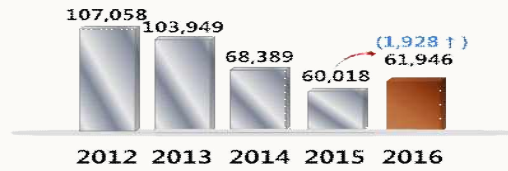
● **2017년, 친환경농식품이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농식품부 보도)**

◇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 4년만에 증가 재도약 발판마련,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민간인증기관 일원화 등 새로운 전환점 기대**

□ 농식품부가 지난해 4년 만에 증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에 힘입어 올해 다양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ha)>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호)>

▶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건수: ('13)5,659건→('14)6,411→('15)3,126→('16)2,727

▶ 유기농자재 중 잔류농약검출건수 ('16) 632점 검사 농약 불검출

▶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15) 64%→('16)68%로 향상

□ 반려동물사료와 벌꿀에 대한 유기 인증제를 6월부터 시행. 또한,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 보급 확산('17년 1,000개 매장)

□ 그동안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친환경 인증 업무는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모두 이양하되, 농관원은 대신 인증기관 관리에 집중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 등급을 공표하는 평가제도 시행

□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도 1월부터 농관원으로 일원화되었고, 공시와 품질



인증 제도는 6월부터 공시로 통합

(기존) 공시 및 품질인증 → (개선) 공시로 통합 및 효능·효과 표시

□ 친환경 농가의 적정 소득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인증·자재 등 비용 지원을 확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등 직불제 개편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등

"올 한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친환경 인증제도개선, 신(新) 유통채널 확충 가공·외식·수출 기반 확대, 농업인 소득 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국산 농산물 차별화 위해 '안전성' 높여야

-소비자 '안전·건강' 중시 유기인증농가 확대, 부실인증 없도록 노력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열린 '2017 농업전망대회'에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농경연이 선정한 5대 식품 소비 트렌드(①건강·안전 ②고급·다양화 ③간편화 ④합리화 ⑤윤리적 소비) 중 압도적인 1위(점유율 38.2%)를 차지했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모바일 거래 확대 등으로 소비 행태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 소비

에서만큼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농축산물 신뢰를 확보하려는 각종 정책을 펴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등이 그것이다. 최근 실적을 보면 두 제도 모두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2016년 말 기준 GAP 인증 농가수는 총 7만4973가구로 전년보다 40% 증가했으며, 인증 재배면적 또한 전년보다 35.8% 증가한 8만8859ha를 기록했다. 2015년까지 4년간 하락세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도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1년 전보다 5.8% 증가한 6만1946호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특히 유기인증 농가수(1만2896호)는 1년 전보다 11.1% 늘어나며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엔 갈 길이 멀다. GAP 인증 농가의 전체 농가수 비율은 6.9%에 지나지 않으며, 재배면적 기준으로도 5.3%에 불과한 현재의 인증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또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13년 부실인증 사태로 남은 신뢰성에 대한 균열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속적으로 줄고 있긴 하지만 2016년 친환경 부실인증 건수가 2734건에 달해 아직 충분히 준비됐다고 보기 어렵다.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하려면 국산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 농관원,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대

- 환경보전 효과가 큰 유기농 중심으로 친환경 실천면적 증가 -

○ 촘촘한 인증관리로 친환경농업 질적 성장 전환

* 유기농/전체인증면적(천ha) : ('14) 18/83 → ('15) 18/75 → ('16) 2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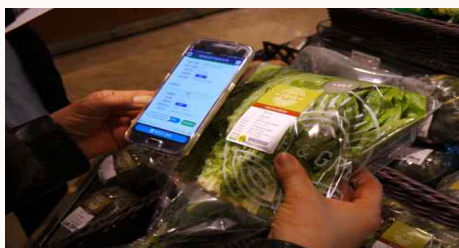
○ 인증관리 강화, 생산자 교육 확대 등 유기농업 기반 구축 추진

* 인증농가조사 확대(%) : ('16) 20 → 30 / 유기농업 교육·훈련제도 도입

* 교육 : (생산자) ('15) 1,403명 → ('16) 2,353, (심사원) ('15) 275 → ('16) 835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만족도 : ('14) 61.6 → ('15) 64.3 → ('16) 67.6

「친환경농산물 안심유통시스템」으로 인증정보 확인(H백화점)



◎ 한친농 제9회 정기총회 · 기념세미나 성료



제9회 한국친환경협회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가 2월 10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됐다. 협회장(권옥술) 및 임원단은 연임되었으며, 정회원⇒이사(김영선, 유문선, 최범영)로 선임 되었다. 세미나에서는 3주제 발표(농관원 인증관리팀장, 농진청비료사무관, 안인박사)에 이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 열띤 토론을 벌여 당국에 건의키로 하고 성료되었다.

□ 주요 토론 결과

(좌장 농어민신문 편집국장, 강원대인증팀장, 실용화재단인증팀장, 조광휘이사장 등)

- 향후 제4종복비, 유기질비료 및 미생물 등 현안 T/F 설치 분과 활동을 강화하고 연례 친목 모임도 가지기로 함
- 강원대, 실용화재단, 순천대 유기농자재인증기관 협의회와 한친농 T/F팀과 현안 토의를 활성화하기로 함
- 유기농업자재/비료중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토록 건의
- 자가제조 원료지원시 농약검출 문제를 공시 유기자재 제품관리와 형평성에 맞게 원료 수입관리 강화를 건의키로 함
- 비료 및 유기농자재 가격표시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되므로 업체가 편리하게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농진청)
- 수출협의회를 활성화하되 DB에 입력하지 않으면 농식품부 지원이 불가하므로 협회주관 DB화작업에 협조 수출지원사업에 적극 동참 수출을 활성화
- 이상 논의된 비료/유기농자재 현안외 모든 사안을 회원사로부터 취합 각 당에 건의하여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차기 정부에 반영시켜 나가기로 함

◎ 친환경 뉴스 클리핑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대선공약 요구안 마련

▣ 유기농자재 자가제조 원료 지원 제외 논란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대선공약 요구안

□ 4대 핵심과제

1. 한반도전역을 친환경유기농업화 하기 위한 정책 수립

2. 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한 농민기본소득 보장 3. 학교급식법 개정과 공공 급식 확대 4.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 및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 10대 세부과제

1. 벼 재배를 유기농으로 전면 전환 2. 친환경 동물복지를 축산의 기본전략으로 전환 3. 친환경의무자조금 조기 정착 및 확대 4. 친환경농산물 통합 유통조직 (친환경농협) 설립 5. 생협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 지원 확대 6. 국내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추진 7. 저농약 실천 농가 및 일반농가의 무농약, 유기농으로의 전환 지원 8. 유기종자 육성지원 9. 인증제도 개선 10. 생태를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유기농업의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다.

▣ 유기농자재 자가제조 원료 지원 제외 논란

원료 수입업자 및 친농연은 농식품부에 “고비용 구조개선을 위해 농가의 자재 자가제조에 소요되는 원료의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농식품부는 농민의 수요가 많지 않고, 공시제도로 관리되지 않는 자재원료 사용으로 인한 유해중금속과 농약 성분검출 피해우려가 제기돼, 올해부터 지원제외키로 했다”며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자가제조농민들의 부담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미공시 원료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공시품은 아니더라도 안전성이 보장된 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내놓겠다”며 현재 의견수렴 재검토중에 있다(한국농정신문2.12)

◎ 수출시장 동향

▣ 2017 제18회 CAC(농자재박람회), 3월 1~3일 개막, 중국상해 신국



제전시센터...한국관설
치 16개 업체 참여,
2/28일 전략세미나, 매
칭상담회, 네트워킹 만
찬, 3/1~3일 현장매칭
상담회 개최(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지원)

▣ 중국 시안 서북과기대학과 교류회

-2.20일 서북대교수 6인 한친농방문 친환경농자재 기술교류세미나



- 한·중 대규모 친환경농자재 시범사업 및 친환경단지 조성 확대
2.26~28일 시안에서 2차 교류회 개최 : 중국 서북대 산학연과 B2B 미팅 개최 협력 확대

◎ 농약 비료소식 클리핑

■ 농협 계통농약 신청 결과 6204억원으로 집계

지난해보다 57억원 증가... 가격은 평균 3.3% 인하, 개발비·유가·인건비는 오르는데...농약회사 '침통, 영업이익률 갈수록 곤두박질...거시적 해결책없나

■ IPET 및 한국연구재단 등 농축산자재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농약업체들은 이익률이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워져 기업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목소리. 중국의 환경 규제로 인해 농약 원제 공급 회사들의 생산량이 줄면서 일부 원제가격도 상승하고 유가도 오르고 있다. 늘어나는 개발비와 인건비, 유가에 따라 기업의 유지비는 늘어나는데 영업 이익은 떨어지고 있다. 다수의 농약업계전문가는 "어려운 농업 환경에 농협의 입장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농협이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농약가격에 목매기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2월10일자 영농자재신문)

■ 농축산자재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정부의 농식품 후방연관산업 R&D 확대방침에 따라 IPET 등에서 농축산자재기술수요를 조사중이다. 관련기관에 개발 RFP를 작성 제출시 많은 과제가 생성될 것이 예상된다

◎ 기타 소식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관할이었던 농기자재정책팀이 3월부터 창조농식품정책관으로 이관된다. 창조농식품정책관 소속인 종자생명산업과, 친환경농업과, 과학기술정책과, 창조농식품정책과 등과 상호 연계되는 정책, 사업 등이 많아 협력과 조율을 통한 발전적인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 인사

농식품부 신임 농기자재정책팀장에 최호종 서기관 (2017.2.20일자)

농촌진흥청 인사발령(2017. 2. 27)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황정환(黃晷煥)